

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

2015. 4. 9.

강경훈

(동국대 경영학부)

차 례

1. 문제의 제기

2. 신용정보 공유와 정보 보호

3. 신용평가제도의 개선

1. 문제의 제기

금융하부구조의 정의

- ▶ 시장의 거래준칙이나 금융기관 인가 및 경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체계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금융거래와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 (한국은행, 2011)
 - 금융거래는 **정보의 비대칭성**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불공정·불건전 금융행위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는 법률과 감시 장치 필요
- ▶ 금융하부구조는 “금융시스템의 기초 여건으로서 금융중개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, 정보, 기술, 규제 및 기준 등을 포괄” (Miller, Mylenko and Sankaranarayanan, 2009)
 - Financial infrastructure is the underlying foundation for the financial system including the institutions, information, technologies and rules and standards which enable financial intermediation.

금융하부구조와 정보의 흐름

- ▶ 금융하부구조 중 **정보 흐름**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문들:
 - 신용정보 공유제도
 - 신용평가제도
 -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등록소
- ▶ 정보의 생산이나 유통 등에 장애나 왜곡이 있는 경우 신용경색, 나아가 **금융위기**로 연결될 수도 있음
 - 2003년 카드대란과 개인신용정보의 공유 문제
 - Vives(2008)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이 ‘정보’에 있다고 지적 (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초한 유동화 상품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 신용정보가 제대로 평가, 전달되지 못했으며 위기의 전파과정에서는 각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)

정보 관련 하부구조와 금융산업

- ▶ 정보 관련 금융하부구조와 금융시장·산업 간에는 **보완관계** 및 **경쟁·대체 관계**가 모두 가능
 - ▶ 금융정보시장의 경쟁 문제 또는 제도 개선은 금융시장·산업과의 관계, 정보생산의 유인 등을 고려할 필요
- ▶ 보완관계
 - 신용정보의 공유가 신용시장(credit market)의 경쟁을 강화 (Ex: 대부업 신용정보의 집중: 2015.3.30부터)
 - 신용정보의 공유가 담합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
 - hard information 공유가 은행의 soft information 생산 촉진
- ▶ 대체·경쟁관계
 - 신용평가 서비스와 은행의 대출심사
 - 회사채시장과 은행 간의 관계와 유사

신용정보 공유와 정보주체의 권리

▶ 사생활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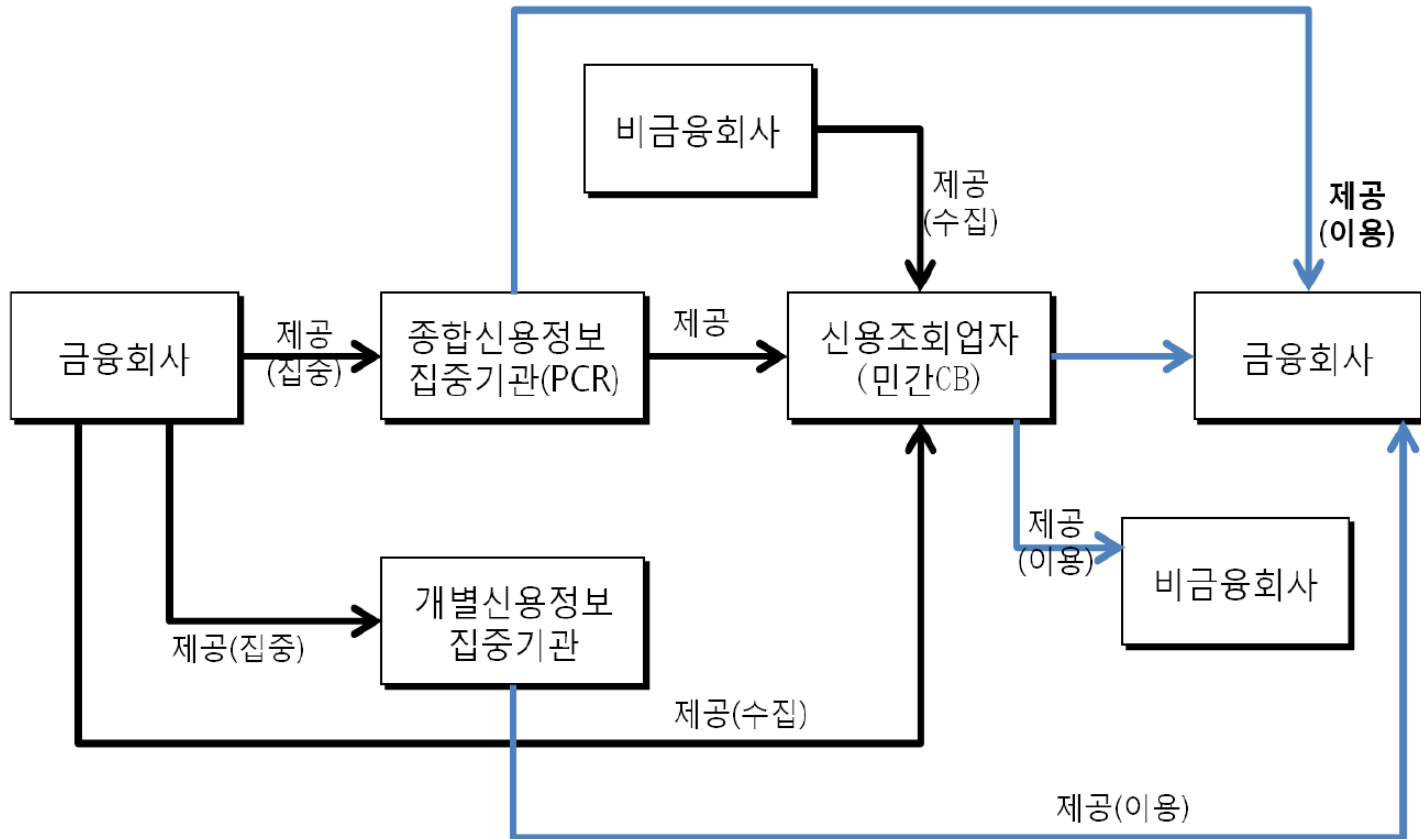
- ▶ **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**: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 제10조(인간의 존엄과 가치, 행복추구권)와 헌법 제17조(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)는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 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보장
- ▶ **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건**(2014.2)
- ▶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(2015.2.16)
- ▶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(2014.11.18, 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)

2.

신용정보 공유와 정보 보호

신용정보 공유제도

- ▶ 신용정보 공유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각자 구축한 신용정보 데이터를 공유하는 제도



자료: 한국금융연구원(2014)

신용정보법 일부 개정(2015.2.16)

- ▶ 의원 발의된 16건 개정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것임
- ▶ **개인정보주체의 권리**를 대폭 강화
 -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 제한 등 개인정보 수집·보유·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 마련, 파기 원칙도 신설
 - 금융회사의 본인 신용정보 이용 상황을 확인 가능케 하고, 명의도용 우려 시 신용정보 조회 중지 요청 가능
- ▶ **징벌적 손해배상, 법정 손해배상 제도** 도입을 통해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
- ▶ 신용정보 집중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신용조회회사의 부수, 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를 제한

신용정보법 전부 개정법률안 (1)

- ▶ 현행 「신용정보법」을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법으로 개편하는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(2014.11.18)
 - 「**개인정보보호법**」이 제정·시행(2011)됨에 따라 신용정보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으로의 지위도 재정립
- ▶ 법률 제명 변경: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
→ 「**신용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법률**」
- ▶ **신용정보** 및 **신용정보처리자**의 재정의
 - (현행) 신용정보를 한정적 열거 → 해당정보를 이용·제공하는 모든 자를 신용정보이용·제공자로 정의
 - (개정) 신용정보처리자를 한정적 열거 → 신용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모든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로 정의

신용정보법 전부 개정법률안 (2)

▶ 신용정보 보호 강화

- 최소처리 등 정보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동 원칙이 신용정보 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함
-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시 모든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동의를 의무화하고, 원칙적으로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
-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중 권리 강화 (2단계 구분 관리)

▶ 신용정보의 자기결정권 및 권리보장 강화

- 포괄적 동의를 폐지하고, 정보수집·제공 시 마다 개별적 동의를 의무화
- 신용정보 처리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·제공사실에 대해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

신용정보 부문 정책과제 (1)

- ▶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금융회사 등 개인 금융정보를 관리·이용하는 곳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·제재하는 **상시 감독 시스템** 구축
 - 금융회사의 직접적인 정보관리 및 모집인·제3자 제공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들에 더하여 **정부 또는 감독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**을 물을 수 있는 체제 구축
 - 정부 또는 감독당국의 상시 관리·감독 시스템의 중요성은 미국, EU 등 해외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Mayer-Schönberger(2010)는 미국보다 유럽의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되는 것은 정부, 감독당국 및 민간회사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**정보보호 네트워크** 때문이라고 주장
 -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정보이용동의서 등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유지

신용정보 부문 정책과제 (2)

- ▶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**지적재산권 및 도덕적 권리**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중장기적 법률 개정 과제로 추진
 -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상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이 인정되고 관련 법률에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된 원칙 조항들이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에서와 같이 정보주체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못한 상황
 -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의 경우이나 소송을 생각할 수 있으며 최근 새로 도입된 '징벌적 손해배상제' 등도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도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
 -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**지적재산권**뿐 아니라 양도불가능한(inalienable) **도덕적 권리**(moral rights)도 포함되는데 정보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없애려 하는 문제도 감안하여 정교하게 정의될 필요

신용정보 부문 정책과제 (3)

- ▶ 정보주체의 '**적극적**'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용정보 공유가 과도히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주체에게 자기정보의 제공, 보관 등 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
 - 최근 일부 개정된 신용정보법 및 전부 개정법률안에는 다양한 정보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일부 조항들은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자기정보의 보관이나 공유를 원하는 정보주체에게는 자기정보 결정권을 제한하는 효과
 - 예를 들어 대부분의 개인신용정보는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하는데 해외유학생의 경우 5년 이상 신용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
 - 일률적인 정보보호 조치들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결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논리는 **공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**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음

신용정보 부문 정책과제 (4)

- ▶ 최근 **빅데이터(Big Data)** 개념이 다양한 사회, 경제 분야에 접목, 활용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으며 금융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
 - 다른 데이터 유형과 달리 빅데이터는 고객의 신용정보, 개인 정보, SNS를 통한 이미지, 위치 등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모으기 때문에 유출사고 시 사고규모가 막대해질 가능성
 - 또한 빅데이터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개인들에게 수집 및 정보활용 방법에 대해 사전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
 - 방송통신위원회의 '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'에 따라 **비식별화** 조치를 취하여 빅데이터를 생성·이용할 수 있으나 비식별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
 - 빅데이터 **활용 방법의 확대** 문제를 추가 검토할 필요

3. 신용평가제도의 개선

해외 주요국의 신용평가제도 개혁

- ▶ 신용평가제도가 **글로벌 금융위기**를 초래한 장본인의 하나로 거론되면서 각국의 규제기관과 국제기구들은 신용평가사들의 문제를 검토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계속 (G-20, IOSCO, 미국 SEC 및 재무부, EU 등)
 -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-프랑크(Dodd-Frank) 금융개혁법을 통해 CRA에 대한 규율방식을 종전 시장자율체계에서 SEC에 의한 감독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
 - 도드-프랑크 금융개혁법에 포함된 신용평가사관련 규제안은 CRA의 전문가 책임(liability as experts) 강화와 신용평가프로세스의 개선과 이해상충문제의 축소 방안을 포괄
 - EU의 경우에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계기로 2008년 CRA에 대한 강제등록제도를 도입하고, 2010년에는 유럽증권시장감독국(ESMA)에게 CRA에 대한 광범위한 감독 권한을 부여

신용평가 부문 정책과제 (1)

- ▶ 2013년 상반기에 도입하려 했다가 시장상황의 악화 등으로 시행이 2015년 상반기로 미루어진 바 있는 **독자신용등급제도**를 예정대로 도입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
 - 신용평가등급은 개별회사 상환능력과 외부지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독자신용등급은 평가요소를 모델화하고, 경상적인 정성 요소를 감안하여 도출한 등급이며, 여기에 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가미하여 최종 신용등급이 결정됨
 - 독자신용등급은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의 경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웅진홀딩스, LIG건설, 동양그룹 사태를 거치면서 계열소속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필요
 - 반면 독자신용등급에 대한 일부 오해를 교정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

신용평가 부문 정책과제 (2)

- ▶ 발행사 압력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**신용평가 기관 지정제** 등은 단기간 내에 도입하기 어려움
 - 동 제도의 도입 문제가 Dodd-Frank 법의 조항으로까지 기술된 미국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도입되지 못하였음
- ▶ 다만 **자발적 신용평가기관 지정제**의 도입을 검토
 - 신평사에 대한 평가 및 감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발행사의 의뢰를 받아 자체 평가결과와 무작위추출 등의 방법을 결합하여 신용평가기관을 결정
 - 기관투자가들이 발행사 선택 신평사의 등급과 자발적 지정제에 따른 등급을 차별하는 경우 쉽게 활성화될 수도 있음
 - 장기적으로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평판자본 축적을 촉진 (아시아 채권시장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 건의를 검토)

신용평가 부문 정책과제 (2)

- ▶ **신용등급 비교** 공시 사이트의 개선, 신용평가에 대한 평가 횟수 확대, 신용평가 전문가 간담회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대
 - 신용평가사간 제공 정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신용평가 비교 공시 사이트 개선
 - 개별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 구분 기준을 존중하되 이들의 신용평가 성과가 비교 가능하도록 부도율·전이율·등급상향률 등의 기준을 마련
 - 장기적으로 미국의 Egan-Jones Rating Company와 같이 **투자자로부터만 수수료를 받는 CRA** (subscriber-based)를 별도로 도입하고 equal access 조항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

감사합니다!